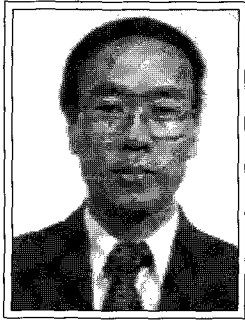




국내외 원전 사업 추진 환경

이 태 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정책실장



세계 원전 산업의 경쟁력 상대적 증가

1979년 미국의 TMI 2호기,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3호기에서 발생한 대형 원전 사고 이후 침체에 빠졌던 세계 원전 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WEC, AREVA, BNFL 등 세계 원전 산업계의 구조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고 여러 나라에서 새

롭게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거대 에너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인도,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원전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최근의 고유가 지속과 석탄가의 급등, 금년 2월 16일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는 세계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 원전 산업은 세계 원전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달리 원자력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영향력 증대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원전 산업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원자력이 국가 에너지 안보의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원전 사업 추진 환경

1. 전반적인 동향

원전 사업은 경제 개발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많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고유가가 계속되고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로 인해 미국 및 유럽에서도 원자력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James Lovelock 교수(런던 인디펜던트지 2004.5), Monterfiore 주교(런던 카톨릭주간지 2004.11), 그린피스 설립자 Patrick Moore(미국 Miami Herald지 2005.1)와 같은 환경운동가들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이유로 원자력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전 세계

31개국에서 434기가 운영중이고,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16%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건설 33기(2,805만kW), 계획 38기(3,972만kW) 등 71기의 원전이 건설 또는 계획중에 있다.

2. 미국

103기의 원전 운영으로 총발전량의 19.9%를 점유(2003년)하고 있는 미국은 1973년 이후 30년이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해 왔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산업계에 고무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LR(License Renewal), Power Up-rating, 신규 원전 통합 인허가와 같은 규제완화(Deregulation) 정책으로 원전의 상업적 가치가 급상승하는 등 원전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원전의 설비 이용률이 약 60%에서 90% 이상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23,000 MWe의 설비 증가에 해당하여 23기의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고 가동중 원전의 성능 개선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1970년대부터 4,130MWe의 출력을 증대하였다.

LR 제도를 통해서 2005년 3월 현재 이미 원전 30기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고 18기가 규제 기관의 심사를 받고 있다.

또 Energy Policy 및 Nuclear

〈표 1〉 국가별 원자력발전 정책

구분	주요 국가
원전 유지 (계속 운전 포함)	캐나다, 스페인, 스위스, 멕시코, 남아공,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원전 추가 건설	일본, 프랑스, 핀란드, 한국, 미국, 슬로바키아, 러시아, 대만, 중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인도, 체코,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이란, 불가리아
원전 축소(단계적 폐쇄)	독일, 영국,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주) 원전 축소 국가 중 독일 이외에는 원전 정책 전환 가능성 시사

Power 2010 Program의 추진으로 2010년까지 1~2기 이상의 신규 원전이 건설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DOE)는 원전 부지의 사전 승인과 통합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원전 사업자들은 Clinton, North Anna Site 등 3개 부지에 조기 부지 허가(ESP)를 신청(2003.9)하였고 DOE는 Nustart 및 Dominion 2개 컨소시엄이 신규 원전 건설 통합 인허가(COL)를 추진하는데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오랜 숙원 사업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Yucca Mountain Project) 건설 사업과 환경 친화성과 자원 활용성을 갖추고 안전성과 신뢰성, 경제성, 핵비확산 능력이 강화된 제4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GIF, I-NERI 등)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4년 10월 실시한 NEI 여론조사 결과, 원전 건설 60% 지지 및 계속 운전 83% 지지 등 원전 사업

에 있어 미국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3. 프랑스

59기 원전 운영으로 총발전량의 78.1%를 점유(2004년)하고 있는 원자력 강국 프랑스는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이 지배적이며 이탈리아·영국 등에 연간 생산 전력의 16.4%를 수출하는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다.

이런 프랑스의 원자력 사업은 2005년 4월 중소기업 회의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모범 사례로 인용할 만큼 원자력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CEA(원자력청), Framatome ANP, COGEMA 등을 통합한 AREVA라는 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자본력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원자력산업을 재편했고,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공동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게다가 프랑스 정부는 2015년 경 수명이 만료되는 최초 원전을 대체



하기 위한 신형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EPR 실증로 건설 지원 에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2004.6)시켰고 2004년 10월,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영국 해협 서부의 플라망빌 원전지역을 2007년 착공을 위한 EPR 건설 예정 부지로 발표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AREVA는 중국과 핀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 미국 내 원전 설비의 정비, 출력 증강, 설비 개선 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일본

52기 원전 운영으로 총발전량의 30%를 점유(2004년)하는 일본은 최근 잇따라 미하마 원전 2차 배관 파열과 같은 안전 사고 및 동경전력의 결합 온도 사건으로 국민적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원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 전력공급 계획(2004.3)에서 2015년까지 1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하고, PSR(경년 열화 평가 포함) 및 정기 검사를 활용하여 쓰루가 1호기, 후쿠시마 1호기 등 원전 7기를 계속 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원에너지청은 2030년도까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을 37~47%로 증대할 계획이며, 정부

는 교토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자력발전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 시장의 자유화는 공급 전압 2만볼트, 계약 전력 2,000kW 이상의 전력 시장을 부분 자유화(2000.3)하였고 금년까지 전면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5. 캐나다

17기 원전 운영으로 총발전량의 12.5%를 점유(2003년)하는 캐나다는 온타리오 하이드로 소유의 Pickering A 원전과 Bruce A 원전 등 총 5기가 운영 실태 부실과 핵연료 압력관 교체 목적으로 장기간 가동 중단되었고, 요즘에는 중국 친산 III 1·2호기(2003년),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2호기(2006년) 사업과 같은 해외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원전 운영 기간은 통상 2년(6개월~5년) 주기로 운영 허가를 갱신하고 있고, Pickering A 4호기의 경우 압력관 교체 후 30년 이상 운전중(2003.9)에 있다.

정부는 2002년에 2007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청정 에너지로 대체하며 에너지 절약을 확대키로 발표하였다.

2004년 1월 천연자원부 장관은 AECL의 '원자력 르네상스' 구상을 지지하며 전력 공급과 환경을 위

한 원자력산업의 유지·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 유럽

영국은 23기의 원전 운영으로 총발전량의 23.7%를 점유(2003년)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회사인 BE가 파산 위기를 초래하는 등 원자력산업의 시련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BE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한 전력 법안을 제정(2003.5)하였고 또 금년 2월 16일 발표된 기후변화협약의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해 블레어 총리는 5월 5일 국민투표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원자력 사업의 재개를 검토할 것임을 천명했다.

핀란드는 4기의 원전 운영으로 총발전량의 27.3%를 점유(2003년)하고 있고 핀란드 TVO는 프랑스 AREVA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2003.12)하였다.

이후 건설 부지 굴착 작업 착수(2004.2), 건설 허가 승인(2005.2) 등을 통해 신규 원전 1,600MW급 EPR Olkiluoto 3호기의 건설을 추진(2009년 준공 예정)중에 있다.

최근 TSN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6%가 원전을 지지(2004.11)하는 등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 성향도 타유럽 국가와 다르게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는 5기의 원전 운영으로 총발전량의 39.7%를 점유(2003

년)하고 있고, 수력을 포함하면 총 발전량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1990년 국민 투표에서 2000년 까지 10년간 신규 원전 건설을 동결한 바 있으나 2003년 5월 국민 투표에서 반원자력 법안이 부결되어 전력사 산하 실무 그룹에서 2025년에 상업 운전 가능한 원전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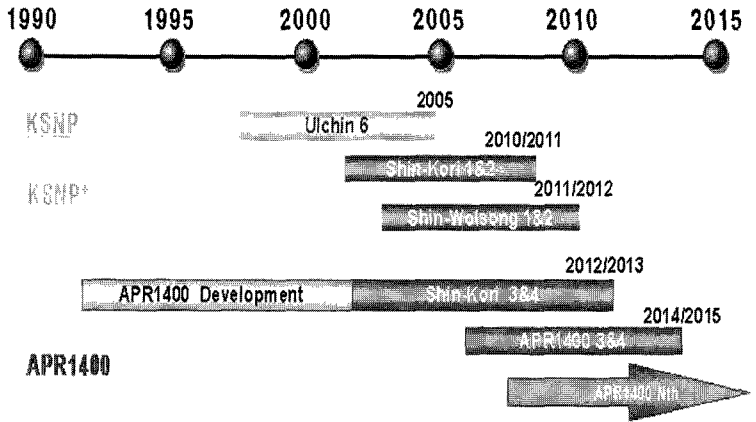
스웨덴은 11기의 원전 운영으로 총발전량의 49.6%를 점유(2003년)하고 있고, 수력을 포함할 경우 총발전량의 90% 이상이 공급되고 있다.

1980년 국민 투표로 원전 폐지를 결정하였고, 의회는 1998년 Barseback 원전을 포함하여 점진적인 원전 폐지 계획을 승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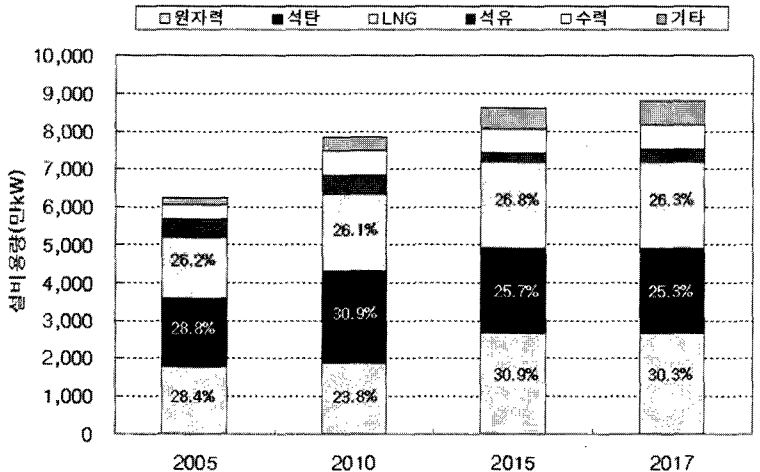
이에 따라 1999년 11월 말에 Barseback 1호기가 폐쇄되었고 2002년에 제정된 에너지정책법은 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그러나 2003년 말 계획되었던 Barseback 2호기 조기 폐쇄 기한이 연기되었고 가동중 원전의 출력증강도 추진중에 있다.

2004년 8월 실시한 여론 조사는 국민의 80%가 원자력을 지지하였고 폐지 지지 7%, 신규 원전 건설 지지 21%로 원자력에 대한 지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 중장기 원전 건설 계획



〈그림 2〉 중장기 설비용량 전망(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2004.12, 산자부))

국내 원전 사업 추진 환경

1. 신규 원전 건설 현황

2005년 4월 22일 한국표준형원전인 울진 6호기의 상업운전을 계기로 총 20기의 원전이 가동중인

우리나라는 원전 시설용량 17,716 MW로 설비용량 기준 세계 6위, 총발전 설비용량의 27.9%(2004년)를 차지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건설 준비중인 설비는 6기(신고

〈표 2〉 원전 수명 관리 연구 현황

구분	기간	연구 내용	연구 결과	
고리 1호기	1단계	1993~1996	계속 운전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있음 - 상세 수명 평가 연구 필요
	2단계	1998~2001	상세 수명 평가 및 열화 관리 방안 연구	- 50년간 운전 가능
월성 1호기	2000~2003	계속 운전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및 상세 수명 평가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있음 - 핵연료 채널 등 설비 교체시 50년간 운전 가능	

리 1·2, 신고리 3·4, 신월성 1·2), 계획 수립중인 설비는 2기로 신고리 1·2호기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2004.7.14) 및 실시 계획 승인(2005.1.15) 후 부지 정지중이며, 신월성 1·2호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2. 원전 계속운전 추진

가. 제도적 측면

설계 수명이 30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각각 2008년 4월, 2013년 4월, 설계 수명이 40년인 고리 2호기는 2023년 7월에 설계 수명에 도달한다.

그러나 국내 원자력법에는 운영 허가 기간 및 운영 허가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운영 허가 제출 서류인 FSAR상의 설계 수명을 운영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기 검사는 원자력법 제23조의 2, 시행령 42조, 규칙 19조에 의거하여 원자로 본체를 포함한 11개 시

설의 성능에 대하여 20개월 주기로 계획 예방 정비 기간 동안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하며 PSR(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는 원자력법 제23조의 3, 시행령 42조의 2, 3, 규칙 19조의 2에 의거하여 원전 가동 기간 동안 안전성 보증을 위해 10년 주기로 종합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나. 기술적 측면

한수원(주)는 1993년부터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관리 연구'를 수행하여 주요 기기 및 설비의 열화 상태 및 건전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50년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2000년 5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PSR를 통해 현재의 설비 및 운영 상태를 확인한 결과 양호한 결과가 나왔으며 차기 PSR까지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기 교체 등 도출된 안전성 개선 사항을 이행할 경우 안전성이 더욱 향상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성 1호기의 경우는 2001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현재의 설비 및 운영 상태를 확인한 결과 양호한 결과가 나왔으나 차기 PSR 시기까지 안전한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설비의 건전성 감시와 대책 수립 및 유지 관리 프로그램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 경제적 측면

2002년 7월 수행한 월성/고리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시 투자 예상 비용과 계속 운전하지 않고 폐로 후 신규 원전 설비로 대체 운영할 경우를 비교한 결과, 계속운전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1호기 증기 발생기 교체, 월성 1호기 주변압기 교체 등 운영 기간 중 꾸준한 설비 개선으로 설비 상태가 양호하여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데 기기교체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고가의 국가 재산인 발전 설비 활용도를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잔존 자산 가치가 매우 크다.

미국의 경우 고리 1호기 보다 더 오래된 Vermont Yankee 발전소(540MW, 1972년 가동)가 1억 8천 만달러에 매각되었고 Nine Mile Point 1·2호기(630/1,160MW,

1969/1988년 가동)도 7억 6천만달러에 매각되는 사례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3. 원전 출력 증강 추진

출력 증강이란 가동 원전의 종합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써 설비의 설계 여유도를 활용하고 2차측 설비의 효율과 성능을 개선하여 원자로 및 터빈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안전성 향상+기술성 향상+출력 증가 → 출력 증강).

한수원(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력 증강 사업의 대상 원전은 고리 3·4호기(950MWe 2기), 영광 1·2호기(950MWe 2기)이다.

1,000MWe급 원전 건설 비용은 \$1,800/kWe, 500MWe급 화력 건설 비용은 \$1,000/kWe이 소요되지만 출력 증강 비용은 \$400/kWe 정도로 발전소 건설 단가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에 출력율을 증가할 수 있어 전원 설비의 추가 확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4.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2002.2, 산자부)에 따라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 총발전량의 7%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제2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2003.12, 산자부)에 따라 2011

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4.5%, 총발전량의 5.6%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대수력 제외)하여 발전 부문이 총신재생 에너지의 25.7%를 점유하도록 할 전망이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 한수원(주)는 풍력, 태양광, 해양 중심의 기술 개발 참여 및 보급 추진 전략으로 2015년까지 190만kW(수력 포함)의 설비를 확보하여 원전 설비 용량의 7%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로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2005.1)하였다.

한수원(주)는 이미 수력발전 설비를 10개 발전소 27기(총535MW)를 보유하고 있으며, 춘천 수력 외 5개소의 노후 설비를 성능 개선(용량 증대 병행)하여 7.9MW, 청평 수력 4호기 증설을 통해 50MW의 설비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의 시범 사업은 2005년 5월 건설 타당성 조사 및 200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고리원자력본부 내 유희 부지에 설비 용량 1.5MW급 1기의 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의 참여를 통해 한수원(주)는 원자력-수력-신재생 에너지로 이어지는 '청정 전력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5. 방사성폐기물 사업 추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현재 각 원전 부지내의 임시 저장 시설이 2008년부터 울진원전을 시작으로 포화될 예정이며 병원 및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일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원전 부지내 임시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1986년 7월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에 착수하였으나 5차래에 걸친 후보지 선정 과정이 환경 단체 및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1997년 1월 사업의 주체를 과기부/원자력연구소에서 산자부/한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유치 신청에 따라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안군 위도를 후보 부지로 선정, 발표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되었고, 2004년 유치 공모에서도 7개 지자체 10개 지역에서 주민의 유치 청원은 있었으나 지자체장의 신청이 없어 절차가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민의 수



용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중·저준위 처분장을 우선 추진하며 동일한 부지에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은 짓지 않기로 하고,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책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253차 원자력위원회(2004.12.17)에서 의결하였다.

또한 주민 투표 등 절차의 투명성 확보, 지역 지원의 제도화 등을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2005.3.31)하였다.

향후 중·저준위 처분 시설의 부지 선정은 2005년 6월 부지 선정 절차를 공고, 자율 신청과 여론 조사를 병행하여 주민 투표 대상 지역을 선정, 2005년 10월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5년 11월 중·저준위 처분 시설의 부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과제

1.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및 경제성 제고 노력

원자력 사업의 기본 전제는 원전의 안전성에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이용률(최근 3년간 92.8%)에 걸맞게 최고 품

질의 설비를 유지하고, 최신 절차서에 의한 완벽한 운전과 철저한 방사선 안전 관리로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또한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은 운영 인력의 우수성에 좌우되므로 원자력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경제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건설 공법 및 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최신 운영 기술 개발과 적용으로 설비 이용률 향상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 원전 사업의 국민 이해 기반 확산 및 환경 친화 경영 실현

원전 사업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전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윤리 의식에 근거한 원전 운영으로 원전 산업의 국민 이해 기반을 넓혀야 한다.

또 환경친화 경영을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과거와는 다른 변화되는 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에 공존 공영을 위하여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과의 신뢰를 제고하여 원전 산업의 존립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노력하며, 지역 사회는 원전 사업 추진시 함께 해야 할 영원한 파트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원전 산업의 활성화로 연결

21세기는 원자력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고유가 시대와 금년 2월 16일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으로 원자력산업의 역할에 대한 시각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같은 기회 요인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환경이라는 도전 요인 속에서 원전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 전략 강화를 통한 원전 계속 운전과 출력 증강 노력, 제4세대 원전(Gen-IV) 개발 및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 등에 더욱 힘써야 하며,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모두의 꾸준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산업에서 원자력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